

# 중앙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 “헌법상 행정기관 아니다”

“직무감찰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 일치된 의견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 경찰에 수사의뢰  
배우자·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 확대해 전수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2일 여론의 압박에도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태우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위원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제7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권자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

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했다. 선관위는 특별 감사에서 자녀 특별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 의뢰 하고,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

을 다음주 중 징계요청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의원면직 처리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도 나선다. 선관위는 앞서 발표한 인사제도 개선 및 조직 혁신 방안에서 외부 인사의 정무직 임명을 대비해 정무직 대상 인사검증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는 인사 작업에 착수했다”며 “사무총장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차장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검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임용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과 노태우 위원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노태우 위원장은 4일 검찰에 고발당할 상태다. /뉴시스

# “韓위기 직면... 생존·국민 위해 할 바 할 것”

이낙연 전 총리, 24일 귀국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4일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며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에 책임을 생각하고 본인이 할 바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이 위기에 직면했다. 정치는 길을 잃고 국민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며 “국가를 위한 저의 책임을 깊이 생각하겠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활을 위해, 제가 할 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해 6월 출국해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방문 연구원 생활을 했다.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는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독일로 넘어가는 상황에 올린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제가 1년에 걸친 조지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3일 밤(한국시간 4일 낮) 미국을 떠났다”며 “저는 독일을 방문, 튀빙겐 대학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강연한다. 또한 독일 정치인과 동료들을 만나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의견을 듣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몇 곳을 둘러보겠다. 귀국은 24일”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달레스 공항에서 출국 비행편에 탑승하기 전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

이어 “그동안 미국에서 저는 한반도 평화와 미중 경쟁을 연구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낙연의 구상이라는 책을 써내려 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동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길도 모르고,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저를 도와주신 동포들, 제가 외로울 때 밤 한 끼 술 한잔 함께 했던 분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한 핵무장과 미중 냉전 속의 대한민국이 강연 주제였다. 저의 강연을 도와주거나 들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동포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길도 모르고,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은 저를 도와주신 동포들, 제가 외로울 때 밤 한 끼 술 한잔 함께 했던 분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총선 전 국민 신뢰 회복위해 혁신 결단을”

민주 김종민 의원, 연대와공생 심포지엄 참석  
“현재 당 최대 계파 침묵관망파... 이대로는 어려워  
사법리스크·돈봉투 의혹·김남국 대응에 민심 돌아서  
의원들, 이재명·지도부와 허심탄회한 대화 필요있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 기독교 연합봉사관에서 열린 심크뱅크 연대와공생 심포지엄에 참석 “의원들이 많이 알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렵다는 걸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뭔가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어서 변화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그 방향은 아닌 것 같다. 현장에서 들어보면 아직 분위기가 안 좋다.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내 현안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산자산 보유 논란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을 대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자세나 태도, 이런 것에서 민심이 확박 돌아서고 있다는 걸 현장에서 느낀다”고도 짚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 때가 되면 이미 늦는다.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다. 저는 그게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혁신의 결단을 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저는 우리당 의원들이 이제 마음을 다잡을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민주당이 변하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는 이길 수 없다. 쪽줄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지도부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할 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불같이야 유혹을 견디면서 노력하다가 지치면 그만둬야 한다. 자기가 그만두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그만 두게 만든다. 그게 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자기의 능력 갖고 하는 일이 아니다. 남의 권위와 남의 돈을 가지고 결정하는 직업이다. 그래서 이 정치는 법을 어기는 것을 떠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결정할 수 있는, 이 위임을 받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몇 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100도가 돼서 국민의 신뢰가 기체로 날아가는 때가 올

/뉴시스

# “日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국가 안전·미래 위협”

민주 전북도당, 익산시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

전북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물 수입반대를 외치는 ‘국민서명운동본부’가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3일 익산시 영동동 일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개최한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다. 전북도당은 “대한민국 안전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를 국민의 절대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에 대한 국민 목소리 전달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병도 위원장은 “일본 정부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결의했다”며 “국민적 반대 공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가 아닌 응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어와 러시아 등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일본과 가장 근접한 대한민국의 대동행이 무엇일지 조차 알 수 없는 조사단을 파견해 실체를 알 수 없도록 내용을 숨기

는 상황”이라면서 “불법적인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김수홍·이인택 국회의원, 이병철 전주율지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민주당원 등이 참석했고 소상공인과 주부, 어린이까지 많은 익산시민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전북도당은 발대식을 계기로 각 지역위원회와 함께 범국민 반대서명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난 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한국정체방송원(KTV) 업무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이종대 한국정체방송원장이 비롯한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기문대 정채호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도-KTV 국민방송 “지역 홍보 상생 협력 한마음”

정책홍보 협약 체결... 전북의 정책·문화 등 영상 전국으로 송출

전북의 우수한 관광명소와 정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홍보 영상에 정부 정책 전문 채널 KTV 국민방송에 전국으로 송출된다. 김관영 도지사와 하중대 한국정책방송원 송원장은 지난 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홍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 홍보 콘텐츠 교류 및 공동 활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홍보 영상에 정부 정책 전문 채널 KTV 국민방송에 전국으로 송출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정홍보 경험이 많은 한국정책방송원과 콘텐츠 교류를 통해 전북의 문화 매력을 발산하고 지역에 활력을 유도하겠다”며,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정책 콘텐츠 교류 및 공동 활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홍보 영상에 정부 정책 전문 채널 KTV 국민방송에 전국으로 송출된다. 김관영 도지사와 하중대 한국정책방송원 송원장은 지난 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홍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 홍보 콘텐츠 교류 및 공동 활용,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홍보 영상에 정부 정책 전문 채널 KTV 국민방송에 전국으로 송출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정홍보 경험이 많은 한국정책방송원과 콘텐츠 교류를 통해 전북의 문화 매력을 발산하고 지역에 활력을 유도하겠다”며, “내년 1월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고창 농촌협약 공모 선정 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협약 사업 공모에 고창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고창군은 12월까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확정 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중심지 조성,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된다. 그간 공모 선정을 위해서 윤준병 의원은 고창군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농식품부를 다각도로 설득해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2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농가를 찾아 농가일손돕기를 벌였다.

# 도의회 의장·사무처 직원, 농가일손돕기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과 사무처 직원 60여 명은 지난 2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전주시 덕진구의 농가를 찾아 모판을 정리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였다. 국주영은 의장과 직원들은 이날 벼재배 농가와 딸기하우스 농가에서 모판을 준비하고, 수확이 끝난 하우스를 정리했다. /김재훈 기자

국주영은 의장은 “농번기를 맞아 농가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활동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가 관계자는 “전북도의회 직원들 덕분에 수월하게 모내기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